



드러나는 이명박의 재벌 천국 서민 지옥 시대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우경화를 저지하라

지금 민주노동당은 며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임무에 “종북주의”를 명기하자고 고집한 ‘전진’ 일부 회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은 뒤, 여러 위기 봉합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1월 12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중앙위원회 파행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분당은 안 된다’며 수습에 나서자, 분당론자들은 잠시 몸을 낮추고 낮은 포복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작전상 후퇴이지 분당 계획을 철회한 것은 전혀 아니다. 예컨대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1월 7일 <오마이뉴스>와 1월 8일 <한겨레> 기고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문제삼으며 “신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2창당론”에 한발을 슬쩍 걸친 채 말이다.

분당론자들이 눈치 보며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새신”론의 날개 아래 들어와 “제2창당”의 이름으로 사실상 분당과 다름없는 조처들을 관철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중앙위원회 때는 확대간부회의안을 수용하는 듯했던 ‘자주파’의 일부가 그 뒤 심상정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1월 7일 전국 지역위원장

모임에서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은 비대위에 전략공천권을 주자는 확대간부회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강경 자주파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며 타협을 거부한다면 몸을 낮췄던 분당파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다행히 당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1월 6일 저녁에 서울 지역위원장들과 총선 예비후보들은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통한 당의 결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면으로 이어짐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 위기의 진정한 원인
- 분당론의 이해관계
- “종북” 청산?
- “종북주의” 낙인은 왜 문제인가?
-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3~5면

반동의 발톱을 드러낸 이명박

- 재벌 천국 · 서민 지옥 계획
- 입시지옥의 쓰나미
- 인수위의 반역사적 반동들

2, 6~7면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④

린지 저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8~10면

국제

- 제3의 대안이 필요한 미국 대선
- 파키스탄 사회주의자에게 듣는 격동의 파키스탄

11, 12, 13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출소 인사

“삼성 족벌의 심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겠다”

13면

비정규직 투쟁

- 뉴코아 · 이랜드 /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 송파구청

15, 1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강연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1월 19일(토) 오후 3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
1월 20일(일) 오후 2시

주최: 다함께 참가 문의: 02-2271-2395 / atgmail@nate.com 참가비: 하루 3천 원 / 이틀 5천 원

2008년 1월 19일~1월 20일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www.counterfire.or.kr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케냐의 부정선거 항의 투쟁
부정선거 항의 투쟁과 종족간 갈등의 진정한 배경과 케냐 민중에게 필요한 정치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불법 집단 난동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

－ 이명박에 대한
〈조선일보〉류근일의 주문

“승리의 새벽이다 ... 이명박과 함께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왔다 ... 새 날, 새 하늘의 대명 아래서 참과 거짓이 갈리는 확연의 시간 ... 미명 너머 저편으로 물러나는 낡은 광신자들!과... 집권좌파”

－ 고려대 교우회의 ‘MB어천가’

“이명박 당선자는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우리 모두 그를 도와야 한다.”

－ 〈한겨레〉성한용 기자의 타락

“이제야 쥐의 얼굴을 한 고양이아 아니라 고양이답게 생긴 고양이가 정권을 잡았다. 새해가 쥐들의 해인 만큼 민주노동당은 고양이에 물린 쥐들이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한나라당 황진하: “동의안에 ‘내년 철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공색스러운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통합신당 조상태: “주둔 연장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것이다. ... 세종로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데모하는 사람이라도 뵈나”

－ 파병 연장안 통과 때의 헛소리들

“우리 나라 비정규직이 5백40만 명인데 49퍼센트가 자발적 비정규직이고 대개 급여가 정규직의 80퍼센트 이상 ... 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통계를 따로 내서 사용해야”

－ 노무현이 욕먹는 이유

“다소 과장이 됐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 박성수를 ‘흡혈귀’, ‘인신매매’라고 비판한 이랜드 노조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명박 인수위의 ‘역사 가꾸로 돌리기’

조명훈

‘점령군’ 이명박 인수위의 ‘역주행’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경숙과 사공일을 앞세운 이명박 인수위는 정말이지 군사정권 뺨치게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한다]”며 투덜대지만, 5년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온 자가 쏟아내는 불평은 개악의 ‘내용’이 아니라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일 뿐이다.

최루액

“한미동맹, 준법질서 확립, 노사관계 안정, 각종 규제 완화 등 모든 것이 기업할 의지를 높여 주는 것”이라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장 사공일의 말처럼, 인수위 정책들은 하나같이 친제국주의·친시장주의 정부를 구축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국방부는 “1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해 국회 동의 없이 즉각 파병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자이툰 부대가 기름발 위에 있다”는 이명박의 ‘국정 철학’에 호응했다.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멋대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노

무현의 파병 정책으로 무고한 한국인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 갔고, 치솟는 유가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도 말이다.

한편, 행자부는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누더기로 통과된 과거사법조차 사장시켜 추악한 친일·독재의 과거를 덮자는 것이다.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실추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인수위의

지난해 전두환을 ‘알현’한 이명박 — 인수위는 인물부터 정책까지 전두환 시대에서 빌려 왔다

불평에 발맞춰 법무부는 2004년 폐지된 ‘불법집단행동 전담기구’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서울 외곽에 ‘상설시위구역’을 설치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시위대에 최루액과 전자충격총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악에 맞선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인수위가 추진하는 각종 개악들이 아예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도록 지금부터 강력한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의 부패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 때문에 대선 직전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잔피로 특검법을 수용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뒤 특검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노무현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위헌 소송을 하고 특검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록 통과되진 못했지만 기존 특검법에서 후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임명된 전대검 차장검사 정동기는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의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하고 대선 직전까지 현장에서 이명박 관련 수사를 보

고받던 자다. 이처럼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를 고용해 방패막이로 쓰는 것은 이 건희가 즐겨쓰는 수법이다.

법무부는 현재에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이명박에게 알아서 기었다. 법무부의 의견을 근거로 현재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검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좌초할 판이다.

주홍글씨

설사 현재가 합헌 판결을 내려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40일의 짧은 수사 기간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검찰, 법무부의 조직

적 횡방 속에 얼마나 실제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검으로 임명된 정호영도 친기업 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미덥지 않다.

그러나 현재가 이명박을 구해주거나 특검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다 해도 이명박의 ‘주홍글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특검이 설사 좌초하더라도 이명박의 부패·비리에 맞선 투쟁을 계속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BBK 등 부패 의혹이라는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을 끝까지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이명박이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한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이 연행됐다. “좌파 적출 수술”의 예고편인 것이다.

공안기구를 이용해 좌파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의 우파적 발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첩 수사 실적 이 부진”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기는커녕 구속자가 다시 증가했고, ‘일심회’ 사건처럼 진보운동을 겨냥한 ‘마녀사냥’도 여전했다. 구속노동자 수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었고, 대중 집회도 상당수 불허됐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한층의 공격을 하려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더욱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공격을 가속화하면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시도할 것이다.

정신나간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 김정일과 ‘회합·통신’했고, 이명박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회담을 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진보진영의 친북 사상만큼은 혹독하게 탄압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남한의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은 단지 ‘자주파’만이 아니라, 남한 진보진영 전체의 과제다.

이 점에서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 기회주의적 대응은 큰 문제다. 민주노동당에서 ‘자율과 연대’, ‘진진’ 일부 등이 ‘종북 세력을 청산’해야 한 다며 ‘일심회’ 마녀사냥에 동조한 것은 당내 ‘자주파’에 대한 종파적 공격에 눈이 멀어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심회’ 피해자들을 변호한 이덕우 변호사마저 이런 주장에 동조한 것은 놀라울 정도다. 이런 종파적 대응을 이용해 조갑제, ‘국민행동본부’ 등의 우익들은

‘그것 보라. 우리 말이 맞았다’ 하며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가 발표하려던 조승수 소장 비판 성명이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대상일 뿐, 부분적으로라도 용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상의 차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하지 못한다면 이명박을 비롯한 우파들의 공격만 용이하게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 단결 투쟁해야 한다.

최미진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 1면에서 이어짐

정경섭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도한 이 모임은 ‘전진’ 회원인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과 공감대 속에서 열렸고, 이 모임이 채택한 성명에 다양한 조류에 속한 지역위원장과 예비후보들 18명이 서명했다. 이들 가운데는 내부의 분당파 때문에 속을 썩는 ‘전진’ 소속도 있었고, ‘자주파’ 소속도 있었다.

이 성명은 민주노동당의 현재 분열이 평등파 대 자주파 구도가 아니며, 분당론은 평등파의 소수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자주파가 모두 타협 불가의 강경론이 아님도 보여 줬다. 이 성명 채택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자주파 내 ‘인천연합’ 리더인 김성진 전 최고위원도 1월 7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비대위에 전략공천권을 위임해 당의 결속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천명했다.

누가 파행을 원하나

우리 ‘다함께’는 1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확대간부회의 안이 통과돼 당이 비대위 아래 결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드러나는 이명박의 반동과 개악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 우리는 비대위가 “종북주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고집하는 분당론자들에게 분당 회칙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 자주파도 패권주의를 반성하고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비대위는 최선의 방안은 못 돼도 현 상황에서 당이 단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12일 중앙위원회에서도 비대위가 구성되지 못하면 당이 파행으로 치달으며 분당론자들의 세력이 강화될 수 있다. 씹살하게도, 실제로 분당론자들은 당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분당에 유리하다는 음모를 꾸몄다.

얼마 전 한석호 ‘전진’ 전 집행위원장이 쓴 문건이 폭로됐는데, 거기서 그는 “(분당의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평등

1월 7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우경화는 지배자들만 기쁘게 할 것이다

파와 계속 하나의 당에 붙어 있다가는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어쩔 수 없이 분당에 합의하도록 (자주파를)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신당 창당이 확정될 때까지 … 당내 투쟁[을] … 멈추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허구한 날 정파 투쟁으로 밤을 지새우며 상대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대중의 환멸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정말이지 끔찍한 시나리오다. 분당론자들은 ‘자주파’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앞세워 입장을 밀어붙여 왔다고 비난하는데, 이런 음모야말로 특정 정파(여기서는 분당파)의 이익을 당의 이익에 앞세우는 짓이다.

민주노동당이 분열에 의해 약화되는 것은 진보운동 전체에도 큰 손실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가 계급에게 우리의 장래를 의탁할 수 없다는 노동계급의 자각으로서 창립된 것이고 여기에 사회 진보를 원하는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합세했다.

만약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과 ‘전진’ 분당론자들의 계획대로 민주노동당이 분열한다면, “자유주의 세력[의] 몰락

[에 따라] … 진보정당에게 열린 많은 공간”(조승수 자신의 분석)은 그냥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분열이 대중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기는 어렵다는 단순한 진실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신당’에 분열의 논리가 계속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당론자들은 자본가 정당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첫 공직 선거에서 종북파의 당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연구[하고] 준비”(한석호 문건)하는 데 벌써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우리는 당의 주요 간부까지 지낸 조승수 소장이 당내 동지들을 비난하기 위해 〈조선일보〉인터뷰도 마다하지 않는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도 봤다.

분당론자들의 ‘제2창당론’ 경계해야

12일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다 해도 위기와 분열상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가 출범 하더라도 분당론자들이 “종북주의” 청산

같은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제2창당”을 비대위 임무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며 계속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승수 소장은 ‘신당’ 창당을 안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을 이렇게 요약했다. “종북주의와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반성과 제도적 개선[을 비대위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정확한 평가서를 통해 정파등록제 같은 해결책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북주의 등에 대해) 더 강화된 강령을 만들고 여기에 동의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제어”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당원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이고, 일상적 통제와 검열 구조를 갖겠다는 얘기다. 그가 ‘신당’의 가치로 얘기하는 “다양성과 개방성”과 정면 배치되는 얘기다.

비대위는 이런 요구의 일부라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의 결속을 도모할 수 없는 방안이다. 조승수 소장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종북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신당 창당 준비 과정”이다. 말이 좋아 “토론”이지, ‘자민통’과는 함께 못하겠다는 결론을 진작에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전진’ 일부 회원들이 지난 12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종북주의 토론”도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토론의 자유를 들먹인 것은 그야말로 자기 모순적 명분이었던 셈이다.

만약 비대위가 자신의 당 쇄신 임무에 분당론자들이 요구하는 성격의 “제2창당”을 포함하려 한다면 우리 ‘다함께’는 비대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다함께’가 두 번째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당 강령과 주요 당헌·당규 개정은 비대위의 임무가 끝난 총선 이후 평당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그에 기초한 당대회 토론을 거친 의사 결정 과정의 산물이어야지, 비대위의 임무가 아니다.” 비대위는 당의 결속을 강화해 총선 참여를 성공적으로 지도한다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김하영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분당론자들의 주장은 종종 급진적인 색채로 포장돼 있다. 게다가 운동 내 세력들이 NL을 “우파”, PD를 “좌파”라고 잘못 불러온 관행도 분당론의 본질을 꿰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NL 안에도 좌우가 있고, PD 안에도 좌우가 있다.

한석호 문건은 “종북파를 경멸하는 자유주의자”를 ‘평등파’에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이들이 NL 좌파보다 더 좌파적일 수 있는가? 그들은 흔히 “민족주의는 좌파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평등파’의 실천은 대개 ‘민족주의’를 멀리하려다 반제 투쟁을 기피하는 것이었다.

분당론자들이 “종북” 다음으로 크게 내세우는 준별집인 “민주노총 당” 비판은 그들의 우파적 본색을 잘 드러내는 쟁점이다. 물론 “계급연대”(장석준) 같은 용어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민주노총 당”을 비판하며 그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회연대전략”이다. 즉, “빈부격차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로 풀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 내내 퍼뜨린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공격을 수용한 흔적이 있다. 지금 분당론자들이 적극 주창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을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국민파’가 지도부인 보건의료노조였다. PD 우파와 NL 우파가 공유

하는 정책인 셈이다.

분당론자들이 기후변화, 소수자, 이주노동자 의제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민주노동당 안에서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자주파’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이 연행됐을 때 중앙당의 이주노동자 담당 당직자(‘평등파’ 계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파업”이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좋은 의제들을 ‘자주파’ 비난용 또는 제재용으로 사용하면 그것을 모욕하는 셈이 된다.

분당론자들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표방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실천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파등록제”나 “종북” 규제를 위한 강령 개정은 정치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개방

성이나 다양성을 원한다면, ‘자주파’든 무엇이든 내부에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 “다양한 그룹의 참여와 활동”을 원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소수파가 되고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도 달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은 지금은 ‘자주파’가 당의 개방적 운영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지만, ‘평등파’도 바로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권을 잃을 바에야 분당한다는 식의 생각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다함께’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민주노동당은 여러 정파가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전선으로 운영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이라는 합창 속에서 그 일부로서 자기 정파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야지 합창을 해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김하영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김하영

위기의 진정한 원인

최일봉

주지 않았다. 일부가 냉소에 빠진 것이다.

비록 잘못된 결론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노총의 당이기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다. 가령 2005년 울산 북구 재보선 당시 정갑득 후보는 현대차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교섭안에 서명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을 샀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과정 막판에 단병호 의원이 보여 준 타협적 자세도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의구심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반전 문제에서도 비록 운동 건설 측면에서는 열의에 굴곡이 있었으나 적어도 국회에서는 일관된 철군 입장을 취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겪고 있는 갈등은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대선을 통해 입증되자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다. ‘평등파’도 민주노총 상근간부층의 일부(‘중앙파’)로, 민주노총의 신뢰 상실에 책임이 없지 않으면서 위기의 책임을

‘자주파’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내에도 ‘평등파’가 있었다. 비록 ‘자주파’가 상대적 다수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평등파’ 지도자들은 상당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지만, 번번이 지지자들의 바람과 의사를 외면하고 ‘자주파’ 지도자들과 마후에서 협상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1997년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사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관련 있다

‘분당론자’들의 지적에 일말의 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일면적인 것이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다른 면에 ‘평등파’ 자신의 책임이 있다.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당원들이라면,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공과와, 거기서 ‘자주파’와 ‘평등파’가 한 구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해야 한다.

분당론의 이해관계

분당론자들은 ‘자주파’와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이유로 “종북주의”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 명분 성격이 강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주파’의 정치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데 왜 세삼스레 “종북주의”냐는 빈축이 ‘평등파’ 내에서도 나올 정도다.

분당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진정한 이유는 당권 장악이라는 이해관계다. ‘한석호 문건’은 분당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당내 권력투쟁에서의 연속적인 패배와 좌절감”을 꼽는다. 게다가 “당 밖의 평등파(는) 당에 결합할 생각이 없”는 반면 자주파는 더 들어올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전진’ 내 분당 목소리가 대선이 한창 일 때 터져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자주파’가 비례대표 선출을

기존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심정은 “[민주노동당] 안에서 굶어죽을 것인가 밖에서 얼어죽을 것인가” 하는 자조 섞인 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자주파’의 패권적 당 운영은 문제다. ‘자주파’가 당내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누르기 위해 교묘하게 농간을 부린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사실은 ‘평등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전진’ 회원인 김준수 씨는 최근 성북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에서 부정투표 사실(해의 채류자 다리)이 드러나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총선 경선 후보를 사퇴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밀어붙인 것도 패권적 운영의 사례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전체의 후보를 자임해야 할 마당에 대선에서 ‘자민통’ 강령 선전

을 고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분당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당 내에 소수파는 있기 마련이고 소수파는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참을성 있게 해 나가야 한다. 53 대 47의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얘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평등파’ 지도자들은 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기울여 왔는가? 당내 중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포박 포박 밝혀 온 의견그룹이 ‘다함께’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전진’의 김종철 집행위원장과 장석준 씨는 ‘자주파’의 “패권주의”가 “종북주의”에서 나온다고 본다. “당 운동 안에서 그러한 [북한의] 관료 독재 행태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장석준 씨는 ‘자주파’의 패권주의에서 북한을 연상시키기 위한 단어를 교묘히 채택하고 있다. “종북 유일당화”가 그것이다.

“정파연합당의 질서를 뛰어넘는 종북

유일당화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그동안 반대파가 소수 세력으로 당 안에 공존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종북유일당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과장이다. 또, 북한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패권주의”도 열마든지 있다. ‘평등파’가 당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그들은 ‘다함께’를 ‘당내 당’이라고 비난하며 통제하려 했었다. 무엇보다,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자주파’의 문제라면, ‘자주파’와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분당론자들도 ‘자주파’의거울 이미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이해관계가 당권 장악에 있는 만큼 ‘분당론’의 심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비대위 체제에서 당권을 보장받는 선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당” 전망은 상당 부분 당권 보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분당론”은 당권 보장을 촉구하는 압력용 구실도 하고 있는 셈이다.

“종북” 청산을 통한 ‘친북정당 이미지’ 벗기?

당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친북 성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실, 누구나 북한 동포에게 연민을 느끼기는 해도 그 체제의 장점을 볼 수는 없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가난과 불평등과 억압, 그리고 (가령 일본인 납치를 둘러싼) 거짓말과 번복이 폭로돼 왔다. 이런 북한을, ‘우라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환멸을 부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대결이 아니라 화해를 추구하면서도, 또 미국의 대북 압박을 반대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비민주적인 억압 통치를 분명히 비판하고 탈북자를 옹호하는 등 남북 민중의 연대를 최우선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안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이자.

그런데 “친북정당 이미지”를 문제삼는 경향 가운데는 의심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들은 북한 분석을 진지하게 발전시키지 않는다. “왕조”(조승수, 주대환), “봉건”(장석준) 같은 단어로 그 체제의 비합

리성과 전근대성, 후진성을 부각할 뿐이다.

이들은 또 북한을 “국가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데, 북한이 어쨌든 사회주의라는 이 규정과 “왕조”·“봉건”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못한 사회라는 함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보다 차라리 남한에 “총성”하고자 한다.

이들과 달리, ‘다함께’는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남한보다 본질적으로 못하지도 낫지도 않은 똑같이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로 본다. 우리는 남북 두 체제 모두에 반대하며 남한에 사는 사회주의자들로서 남한에 대한 투쟁에 역점을 둔다.

“친북정당 이미지”를 문제삼는 상당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북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남한 주사파에 투영시키는 데 진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다. 예컨대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그들은 북핵에 대한 ‘자주파’의 태도를 문제의 본질

“종북주의” 낙인은 왜 문제인가

친북 경향은 문제지만, ‘자주파’를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북”이라고 하면, ‘자주파’가 북한의 폭두 각시이고 자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김종철 ‘전진’ 집행위원장은 “종북주의는 북한이 관철하고자 하는 노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의 정의는 더 조야하다. “국회에서 남한의 유권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언사인데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니다. 우선, ‘자주파’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하게 분화했다. 그 가운데 북한 정권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소수가 있더라도 이들은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들조차 북한 관료집단과 단순히 동일시할 수 없다. 북한 관료는 북한의 민중을 착취·억압하는 지배 계급인 반면 이들은 국가 탄압으로 고통받은 피억압 계급의 일부이다.

또래, “북한의 입장을 관철하기”(김종철이나 진중권 주장) 위해서라도 ‘자주파’가 남한 대중의 염원과 투쟁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순전히 북한 정권의 입장만 대변하고 남한 민중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들이 운동에 뿌리내릴 수 있었겠는가. 만약 운동에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 정권 옹호 입장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겠는가.

‘자주파’들은 북한 관료와 남한 피억압자 사이에 분포하는 모순된 처지이지, 북한 관료와 완전히 동일한 처지인 것은 아

니다. 특히, 1980년대 남한의 대중 운동이 광범하게 떠오른 가운데 성장한 ‘자주파’들은 누구보다 피억압 민중의 정서에 민감하고 기층에 뿌리내린 세력이다.

셋째, ‘자주파’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다. ‘자주파’의 누구도 “종북”이라는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비대위의 임무로 “종북”(청산이든 토론이든)을 명기하자는 것은 분당 화책이다. 실제로 조승수 소장도 종북주의 제기 자체가 “신당 창당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분당의 나팔수가 된 지식인들

넷째, “종북주의” 반대는 반주사 기치의 다른 표현이고 세력 규합용이다. 이것이 바로 “종북”이라는 표현의 이데올로기 효과인데, 자주파와 북한을 연결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지식인들을 규합하는 것이 분당론자들의 계획이다. 한석호 문건에서 그는 “최장집, 손호철, 홍세화 등 당 밖 진보적 지식인 규합”이라는 분당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여론전을 위한 언론의 우군(友軍)화”를 언급했다. 당 밖 자유주의자들에게 분당 선동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나름의 화답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함께’ 회원 총회에서 최일봉 동지가 지적했듯이, 지식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붕괴를 보면서

로 치환했다.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그들은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출당을 문제의 본질로 치환했다. 이것은 노동대중을 향하기보다 전형적으로 “당내 정치”(즉, 분파 투쟁)에만 몰두하는 이들의 내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길하게도 이것은 우파들이 북핵과 일심회 사건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조승수 소장 말대로 “일심회 사건 한달 내내 민주노동당이 간첩질하는, 조선노동당 2중대 같은 곳으로 언론에 온통 도배질됐다.” 조승수 소장은 이 압력을 수용해 민주노동당이 당내 ‘친북’ 세력을 도려내 자체 정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듯하다. 주대환 씨는 이참에 “트로츠키주의자”도 쫓아내자고 ‘다함께’를 거뻐다.(주대환 씨는 권영길 경선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이었는데, 그 책임 추궁에 직면해 ‘다함께’를 속죄양 삼아 면죄

받으려는 연막작전을 쓰고 있다.)

뉴라이트는 민주노동당을 “김정일 추종당”이라고 비난하며 분열을 부추겨 왔다. “다시 시작하라. 민노당을 창당했던 PD여, 수령주의와 해괴한 민족주의를 추종하던 NL들에게 보내던 그 비판적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김정일과 함께 소멸되어갈 NL주사파의 배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뉴라이트 최홍재)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우파들이 단지 주장으로 민주노동당 분열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인수위는 간첩 잡는 실적이 왜 이리 낮으냐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친북정당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탄압으로부터 당원들을 방어해야만 ‘친북’ 문제에 대한 토론도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폭두각시”?
—북한 지배자들은 미국 주도의 WTO에 가입하고자 하지만 박해받는 남한 자주파는 한미FTA에 반대한다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오른쪽 위))

새로운 정치적 고향을 찾고 싶은데 ‘자주파’가 민주노동당에 파리를 틀고 있으니까 코드가 맞지 않다고 느껴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주파’의] 행태는 당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던 당원들의 입을 통해 … 오퍼니언 리더들(여론주도층, 즉 지식인들에게 흘러)(최병찬)간 상대였다.

이 지식인들은 엄청난 독설을 쏟아부으며 ‘자주파’와의 결별을 선동했다. 최장집 교수는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 내 “주체파”가 문제라고 했고, 손호철은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셔야 한다”고 했다. 홍세화 씨는 “주체파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문화는 광신자 집단이나 사교 집단의 그것에 가깝다”고 했다. 이재영과 최병천 등은 당 내에서 “평소 점잖은 신 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는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독설의 극대화를 꾀했다.

그러나 “종북” 반대 기치로 당을 만들자는 게 “정상적인 좌파”들의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고작해야 뉴라이트 최홍재가 세삼 기억을 일깨운, 1990년대 반주사 기치를 내세운 PD들의 총학 생회 연합 선봉 수준이다.

그것은 PD들의 설움의 정치일 뿐이다. 반주사파 기치야말로 “감동도, 전략도, 비전도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친미가 지배적 문제인 상황에서 “종북”을 최대 쟁점으로 내세우며 세력을 규합하는 것만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삼성 이견회에 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오물법박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는 ‘삼성팬’과 ‘삼성장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삼성 계열사 수준이다.

인수위원장인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신군부의 국보위 출신일 뿐 아니라 삼성의 든든한 우군이기도 하다. 이견회와 네다섯 시간을 이야기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고, “외국은 총장이 사외이사를 안 해 본 게 이상할 정도”라며 삼성 사외이사 경력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이견회 개혁 10년 : 삼성 초고속 성장의 원동력>에서 이경숙은 이견회를 원칙과 기분을 중시하는 사려 깊은 철학자로 평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경숙이 이견회와 아주 가깝고, 이학수와도 만나면 서로 일싸안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말했다.((시사HN) 16호)

이명박은 이견회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주고 이에 항의한 학생 7명을 출교시킨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를 인수위원장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어윤대는 이경숙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삼성증권 사장 출신인 황영기, 삼성 구조본 부사장이었던 지승립 같이 당장 특검 조사와 처벌 대상인 삼성 비자금 조성 공범들도 인수위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금산분리 폐지를 위한 삼성의 각본에 따라 여론 조성에 앞장섰던 전 금융감독위원장 윤중현과 삼성경제연구소 팀장 등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발탁됐다.

이들과 함께 이명박은 이견회 같은 재벌·부자들에게는 ‘천국’이고 서민들에게는 ‘지옥’이 될 5년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 데이비드 엘튼은 자신이 운영주체인 두바이 금융자유지대(DIFC)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DIFC는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세금이 한푼도 없고 노조 결성과 노동 쟁의는 모두 불법이다. 최저 임금제도 존재하지 않아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많은 노동자들은 월 10만달러 20만 원에 불과한 돈을 받고 일한다. 인수위가 내놓는 거의 모든 정책은 이 같은 친기업·반노동자적 색깔에 오염돼 있다.

사유화

재경부는 2백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유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대적

인 정리해고와 공공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 인수위는 이미 우정사업 민영화 원칙을 확정했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한 세트로 내놔다. 금산분리 완화는 특히, 1퍼센트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들 전체를 지배하고 금융계열사를 비자금 조성 창구로 사용해 온 이견회에 ‘복음’과 같다. 인수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한도 없애겠다고 못

박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법인세 7조 원 감면도 주요 공약이다. 반면, 빚더미에 앉은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사면’ 계획은 발표 하루만에 대폭 축소됐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양도세·거래세·중부세 약화 등 땅부자들을 위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 경부운하와 파괴적인 교육정책만으로도, 운하가 지나갈 곳과 강남 사교육 중심지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도청

당선 직후 전경련을 방문한 이명박에게 조폭재벌 김승연은 “지난 5년간 전경련이 대우를 못 받아왔”다며 투덜거렸다. 그러나 노무현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한미FTA를 체결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골몰해 왔다. ‘개혁’ 정부 10년이 만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노동자·대중은 사회 양극화로 고통받아 왔고, 이 배신감과 절망이 모순적일 게도 ‘신자유주의 불도저’ 이명박을 대통령 당선자로 만들었다. 이명박의 사위인 조현범이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노동자들이 맞닥뜨릴 칼바람을 보여 준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 15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도청을

통해 자회사인 ASA의 노조 활동을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사망이 작업 환경과 관련 없다며 알아서 기었다. BBK 특검에 “위헌” 의견을 내며 이명박의 변호인을 자처한 법무부는 일정기간 무분규, 무파업을 유지한 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광폭한 노동자 탄압을 옹호하고, 노동유연성을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경제 하나만이라도’ 살려주길 바라던 사람들은 이미 턱밑까지 차 오른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은 자신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부패 뇌관을 건드릴 BBK 특검과 삼성 특검을 무력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벌써 인수위는 “대기업 수사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삼성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명박은 삼성, 떡값검찰과 함께 부패와 탐욕의 낙원을 만들려 하는 “3인조 강도”나 다름없다. 민중운동은 이들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승주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실낱같은 희망조차 없애버린 ‘잃어버린 10년’이 저주스러울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잡질’ 경제라는 이회창의 냉소도, 사상 최대 규모의 생태계 파괴가 뒤따를 것이라는 환경운동가와 학자 들의 경고도 귀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실업

박정희 정권 시절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당시에 추진된 대규모 건축·토목 사업이 연상돼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대통령 로즈벨트가 추진한 뉴딜 정책이 미국 경제를 공황에서 구출했다는 신화도 이런 기대에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대운하 건설이 그런 기대를 채우기는 어려울 듯하다. 먼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에 성장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현재 고유가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트리플 악재 때문에 성장논커녕 ‘일시적 경기 후퇴도 각오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조선일보) 1월 8일지) 당시보다 월등히 커진 경제 규모와 해외 의존도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설사 그것이 있더라도 대단히 작고 불안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도 당선 직후 7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경제 성장 목표치를 급히 수정해야 했다. 또 대규모 토목 사업이 대체로 “초기에는 수익률이 낮거나 아예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연기금을 쏟아 부어서라도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를 무산시키면서까지 격렬히 반대했다. 다른 경우에도 종종 그렇듯 이들에게 정부의 시장 개입 반대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일 뿐이다.

흔히 알려진 신화와 달리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1937년 8월 미국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기 후퇴가 시작돼 1932년 이후 여러 지표에서 나타난 성공의 절반이 사라졌다.”(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3호)

5년 동안의 경제 성장조차 실업자들에게 긴

대운하 건설로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가 될 공산이 크다

급 원조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쉽게 하는 노동조합법을 만드는 등 소비 수요 증대 노력과 1백1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정부 투자 덕분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반대로 연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투자는커녕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낸 세금과 연기금으로 기업주들의 배만 불러주겠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은 아주 자그마한 성장의 열매조차 노동자들과는 나눌 생각이 없다. 노무현보다 더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화는 더 심화할 것이고 토목 사업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건설 경기가 반짝 호황을 누린 지난 2002년 2003년에 토목건설업에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토목건설업 전체에서 정규직은 오히려 5천 명이 줄었다. 그 결과 이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48.9퍼센트에서 55.4퍼센트로 크게 늘었고 50인 미만의 영세 건설업체에 고용된 사람의 비중이 전체의 31.3퍼센트에서 37.8퍼센트로 늘었다(통계청).

뉴딜

무엇보다 임기 내에 완공하건 10년이 걸리건 기업주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핑계로 2년마다 이들을 대량 해고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그 뒤에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대운하 건설에 수반될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태계 파괴와 부동산 투기 광풍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허물고 더 나은 삶을 살 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출한 것처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면 이런 피해 없이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든지 나아지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명박은 어지간한 투쟁으로는 이런 요구에 쿡방귀도 안 뀌 것이다. 이명박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연금 삭감, 한미FTA 체결,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 조처에 맞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장호중

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30조 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공을 들여 온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해체” 구호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리하던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겨 각 대학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대학 경쟁력이 높아지고 입시 부담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선발’은 학생의 창의력·잠재력 평가가 아니라 내신·수능 반영 비율을 각 대학별로 조합하고 본고사를 시행해 입시 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철저한 대학 서열 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 문제풀이에 더욱 매달릴

1972년 고등학교 입학시험장 앞에 모인 학부모들 — 이명박의 정책은 이런 고입 경쟁을 부활시킬 것이다

수밖에 없다. 이를 지원해야 하는 학부모들도 사교육비를 전혀 줄일 수 없다. 게다가 복잡해진 제도 때문에 입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 입시지옥의 고통은 더욱 끔찍해질 것이다. 인수위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특목고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고교 다양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 학교 등을 3백 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양화가 아니라 계층화다. 15퍼센트 정도의 명문 고등학교와 나머지 ‘통통 학교’로 나뉘,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고교평준화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평가와 경쟁 시스템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며 전국 초·중·고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명문 고교들도 일류와 삼류로 나뉠 것이다.

결국 중학생은 명문고 중에서도 일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

고, 초등학교생까지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경쟁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입시 경쟁 상황을 완전히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고입 재수생이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 이미 대형 학원들은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분원을 늘리는 등 고입 사교육 시장 팽창을 준비하고 있다.

풍전등화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은 입시 경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도 더욱 심화시킨다. 학교별 학력평가 점수가 공개되면 대학들은 공공연하게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것이고, 어려서부터 엄청난 사교육을 받아 일류 학교 진학이 더 유리한 부유층 학생들이 득을 볼 것이다.

또, 입시 ‘자율권’ 덕분에 대학들은 공공연히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거나 본고사와 면접 등에서 부유층 학생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편입학 시험에서 부유층과 대학 교수 자녀에게 가산점을 줬 합격시킨 바 있다. 이런 일은 더욱 광범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의 교육 개편을 열렬히 환영하는 <동아일보>조차 “개별 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의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20퍼센트 정도에 그쳤다. 늘거나 그대로 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2.4퍼센트나 됐다.

한편, 노무현마저 “교육 쓰나미”가 몰려오고 “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라며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공격했다.

그러나 “교육 쓰나미”가 들어오도록 길을 닦아 준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꾸준히 대입 자율화를 추진해 왔고, 이 덕에 대

학거나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 비중을 높이는 입시안을 시행할 수 있었다.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이명박의 명문고 3백 개 건설 방안도 노무현의 ‘1군 1우수고 정책’이나 ‘공영형 혁신학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라면 노무현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정책들을 이명박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거대한 대중적 분노를 살 공산이 크다. 대학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초·중학생까지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등 그 고통과 폐해가 분명해지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함께 연대해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이라는 진보적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강동훈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했던 연설들을 기획 연재하고 있다. 이 글은 마지막 순서

로 **린지 저먼**이 연설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녹취한 것이다.

린지저먼은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이며 영국 급진정당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이다.

-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존 리즈)
- 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린지 저먼)
- 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 (존 리즈)
- 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린지 저먼)



오늘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라면 민주주의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위대한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들은 언제나 민주적 변화를 바라는 광범한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대선배로 여겨지는 칼 맑스와 그의 가까운 협력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1848년 독일 혁명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맑스와 엥겔스가 참가했던 혁명이 안타깝게도 실패했기 때문에, 또 독일 정부가 그들을 매우 위험한 혁명가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망명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여했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왕정과 교화로 이뤄진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사실 맑스는 자신을 독일 민주주의 투쟁의 극좌파로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17~19세기 동안 유럽을 휩쓴 이른바 부르주아 대혁명, 혹은 자본주의 대혁명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민주주의는 자본가 강령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귀족제도와 가톨릭교회와 지배하는 옛 봉건질서를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 혁명, 18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 미국 혁명의 완성으로 불리며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냈다 — 같은 위대한 운동들이 모두 해방 · 자유 · 민주주의의 언어를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오랜 적인 봉건 구질서, 왕정, 귀족제도뿐 아니라 새로운 적인 노동계급과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1848년 혁명을 기점으로 자본가 계급은 구질서보다도 노동계급을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후 자본가 계급은 구질서와 화해하고 노동계급을 탄압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8년 혁명을 일컬어 “사형 집행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말했는데, 실제로 당시 성장하고 있던 노동계급은 결국 자본가 계급과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가 말했듯이 사형 집행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자본가 계급의 해결책은 그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때 자본가 계급이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민주주의 혁명의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총들

이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첫 번째 큰 총들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에서 국회가 생기고,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장기간의 투쟁이 — 영국에서 참정권론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 1백 년(1830~1928년)이 걸렸습니다 —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얻고 더 많은 의회가 생겨날수록 의회가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은 축소됐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두 종류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권력, 즉 투표할 권리와 비록 소수 집단에 해당하더라도 의회와 제헌의

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제적 권력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공장이나 방송국 등을 소유하면 투표권을 가지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심지어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들은 방송국 · 공장 · 대기업 소유주들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치 권력뿐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권력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의 폐쇄 결정은 보통 의회나 정부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본가 개인이나 소수의 자본가 집단이 결정하며 의회는 공장이 폐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민주적 수단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노동계급이 투표에 참가해도 그들의 표는 대기업과 부자들이 지배하는 — 집을 잃거나 실직하는 것이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처럼 느껴지는 — 세상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물론 노동계급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부를 생산하며, 그들이 생산하는 부로부터 자본가 계급의 이윤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 역사의 진행 과정을 바꾸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노동계급은 자신이 사회의 부를 생산하며 자신 없이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보여 줬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일어난 혁명들, 특히 러시아 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 성격이 다른

이유였습니다. 단지 이미 일부 나라에서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된 노동계급이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혁명이 정부와 의회에 대한 지배권 같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자본가들의 경제 권력에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대안 권력의 힘이 최초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1917년 혁명의 예행연습으로 알려진 1905년 혁명에서, 그리고 1917년 혁명에서 소비에트 — 러시아 말로 ‘소비에트’는 평의회를 뜻합니다 — 형태의 노동자 평의회가 설립됐는데, 이것은 노동계급이 만들 수 있는 대안 권력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대안 권력

소비에트는 노동계급의 권력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르 체제에 대해, 나중에는 민주주의 정부로 일컬어진 임시정부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차르 체제의 정치적 외파만 변화시켰기 때문에 러시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고, ‘빵 · 평화 · 토지’ 등 러시아 노동계급과 농민의 간단한 소망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오직 기존 경제 권력에 도전했을 때 실현 가능했습니다.

불행히도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권력을 건설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짧은 기간 동안 노동자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었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성공한 노동계급 혁명을 탄탄한 기반 위에 놓을 수 있는 혁명의 국제적 확산이 실패함에 따라 갈수록 고립되고 왜곡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왜곡되거나

그것의 도입이 연기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정반대인 국가자본주의 독재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착취 받는 노동자 집단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유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자 독재이고, 개인들을 통제하고 획일적 삶을 강요하는 체제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1989년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붕괴했습니다. 스탈린주의 국가가 붕괴한 이유는 세계시장의 경쟁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중국 지배자들이 이 모델에 집착하지만, 현실의 중국은 세계 시장에 개방돼 매우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 노동자들은 혹독하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것을 사회주의의 종말로 묘사하곤 합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종말’을 손쉽게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자유시장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89년 이후로 민주주의의 의미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주주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시가 주장했던 것처럼 폭탄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착취가 더 원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합을

뜻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에 의한 생산의 통제와 진정한 민주적 토론이 결합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독재로부터 이제 막 빠져 나온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경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 등 민주적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싶어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주의 체제] 종결 직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선거가 진행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처음으로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존속시킨 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만 무너뜨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매우 폭력적인 사회이며, HIV · AIDS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흑인 노동자들이 착취 증가에 맞서 흑인이 다수를 점하는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지만, 자본주의 아래 민주주의는 한계가 너무나 컸습니다. 독재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계급 대중의 관점에서 보자면, 단순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뿐 노동계급의 해방 가능성을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 주기는커녕 국제적으로 갈수록 비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민 자본가 집단이나 국회 같은 일국적 수준의 민주적 기구들뿐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기업 집단과 그 우두머리들의 모임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선출된 대통령과 총리 들은 G8 같은 국제 정상회담에서 기업 우두머리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자국민들을 더 잘 착취

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민주주의의 결과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예컨대 기후변화, 자유무역, 전쟁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토니 블레어의 전(前) 공보 담당자는 블레어가 단지 반전 시위를 벌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거슬러 이라크 침략을 강행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과 블레어의 거의 모든 보좌관과 장관의 의사를 거슬러 이라크 침략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결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내려지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결여를 보여 주는 두 번째 지표는 이른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국 총선 때는 고작 22퍼센트의 유권자만이 현 정부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현 신노동당 정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정당성이 취약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거나 정치에 무관심해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전 운동과 온갖 캠페인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의회 정치가 자기 삶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의회를 통해서 자기 삶에 중요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 9면에서 이어짐

이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민주’ 정치인들과 노동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사회라면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정책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갈수록 보통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구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G8 정상회담이나 다른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해 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시위대와 접촉을 피해 호사스런 호텔이나 성(城)이나 오지(奧地)에 숨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갈수록 자본주의 대혁명 이전의 옛 귀족과 왕족 들의 행태를 닮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가 떠오르네요. 앙투와네트는 사람들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거리를 두기 위해 온갖 법률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국가보안법에 관해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이나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의회 1마일 내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가구의 3분의 1이 폭격으로 집이 파손됐다. 독일군은 영국 해협 바로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정부는 현 정부가 이른바 ‘이슬람주의 테러’를 빌미로 도입한 법률들을 도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법률들을 통과시

키는 것은 사람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신자유주의·제국주의적 의제를 강요하려면 시민권의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민주적 목표는 고사하고, 2~3백 년 전에 세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확대할 수 있는

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동유럽 사람들은 서구인들이 누리고 있다고 믿은 자유를 자신들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독재자들을 몰아낸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15~20년 전에 바랐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여전히 많은 빈민들이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 정부는 매우 우익적일 뿐 아니라 반동성애·반유대인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소련에 의존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미국 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동유럽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노동계급이 동유럽 혁명의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동유럽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을 뿐 아니라 중국이 빠른 속도로 공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일부 인

유일한 방법은 현재 우리 삶을 조종하는 경제 권력을 우리 손으로 통제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투쟁, 모든 파업, 모든 캠페인, 모든 점거 등 자본주의 아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들이 대안적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게 됩니

2007년 6월 독일 G8 반대 시위 – 신자유주의는 대중의 민주적 열망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다.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직장 동료와 동료 시민 들을 위해 투쟁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공장·작업장·사무실·대학교 등에 대한 통제 의 문제로 확대할 때만이 진정한 대안적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투쟁은 결국 노동 대중의 민주적 소망을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에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인 것입니다.

정리 발언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노동자와 그들이 받는 비민주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아래서 자본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온갖 조처들이 각 나라마다 존재합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사람들이 금융자본을 비판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거나 어떤 조처를 취하면 그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합니다.

반면에 부를 생산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률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일 추방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금융자본가들을 보내고 대신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런던에 머물게 하자’고 답합니다.

둘째, 중국과 동유럽 혁명에 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의 동유럽 혁명은 독재의 종식과 변화를 바란 진지

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것도 예가 될 수 있지만, 과거 텐안먼 항쟁 당시 학살을 저지른 것이나, 중국이 세계 최고의 사형 집행국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는 매우 군사적이고 억압적입니다. 비록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모든 모순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중국 노동계급은 이미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계급의 불만 수준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앞장서서 중국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속혁명

이것은 어떤 동지가 제기한 민주주의 혁명의 발생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이 주도해 사람들이 바라는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 1905년에 트로츠키가 말했던 이른바 ‘연속혁명’이 아직도 가능할까요?

오늘날 상황을 평가할 때 우리는 트로츠키로부터 두 가지 점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노동계급은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적 일관성을 가진 유일한 세력입니다. 노동계급은 농민, 빈민 등 다른 계급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와 정치는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 노동계급의 경제적 힘은 혁명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 단계에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계급 혁명은 우리가 지금껏 말한 온갖 종류의 민주주의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경제로 환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계의 경제적 동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는 온갖 사상,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시민사회 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 관계, 다시 말해서 착취 관계입니다.

그런 착취 체제에 맞서 싸울 때만이, 착취를 종식시키고 경제 관계를 변화시킬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취·번역 이예송

부토 암살 이후 심화하는 파키스탄의 위기

[편집자 주] 지난해 말 부토의 암살은 총선을 앞둔 파키스탄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국제사회주의자 하룬 칼리드가 오늘날 심화하는 파키스탄의 위기를 설명한다.

베나지르 부토의 죽음이 무사라프 정부의 통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사라프 정부는 부토 암살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군대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파키스탄의 네 개 주 중 두 개 주에 군대가 투입돼 있는 등 부토가 암살되기 전부터 파키스탄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서변경 주와 발로치스탄 주에서는 군대와 다양한 종족·부족 집단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군대와 국가 기구가 완전히 쫓겨난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무사라프에게 탄압의 수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싸우는 탈레반에게 동정적인 파슈툰족이 있는 북서변경 주에서 말이죠.

베나지르 부토의 죽음은 그런 갈등을 더 악화시켰고, 파키스탄 군대는 이제 반정부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신드 주—항구 도시 카라치가 있는 곳—에서도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라프 정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그를 지지하는 집단은 별로 없습니다.

무사라프가 선거를 연기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치 동맹들도 선거 운동을 벌일 처지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무사라프는 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큼니다.

다가온 총선은 파키스탄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기보다 악화시킬 것입니다.

주류 정당들 중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이 초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갈수록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배계급은 베나지르 부토를 구원자로 내세우려 했지만, 지금은 뚜렷한 전략도 없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배계급의 위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민주화 운동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운동의 힘과 영향력은 지난해 무사라프가 해임한 대법원장[초두리]의 복권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절정에 도달했고, 많은 언론인과 시민사회 활동가와 학생 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무사라프 정부는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파키스탄인민당(PPP) 같은 주류 정당들이 이 운동과 함께하기를 거부했고, 무사라프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주류 정당들은 운동이 탄압받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운동에 참가했던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말 무사라프가 계엄령을 철회하고 총선일을 선포한 뒤부터 변호사 운동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조직의 지도부는 운동을 지속하고 더 ‘정치화’해서 무사라프의 사퇴를 요구하자는 쪽과 전문직 기구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쪽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에 아주 역동적인 세력이 새로 참가했습니다. 바로 학생 운동입니다. 비록 아직 참가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말이죠, 학생 참가자들은 대부분 엘리트 대학교 출신이며, 자기 캠퍼스와 거리에서 항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화 운동에서 노동계급은 매우 작은 역할만 했습니다. 최근 노동자 파업과 투쟁 수준이 다소 높아졌으나, 오랜 군부 탄압·사유화·실업·물가 상승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변호사들의 운동에 암묵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운동이 돌파구를 열어 줘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를 바랐던 것이죠. 만약 주류 야당의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거리 시위를 호소했다면 노동자들도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고, 무사라프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베나지르 부토를 파키스탄의 구세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평범한 사람들은 부토를 어떻게 평가하고 암살의 배후로 누구를 지목하는지요?

사람들은 부토가 민중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부토가 예전에 두 번 총리로 있는 동안 부패와 탐욕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폈지만 말입니다.

부토가 빈민들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PPP의 기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1967년에 베나지르 부토의 아버지

이자 당시 총리인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PPP를 창당했을 때, 이 당의 구호는 “모두에게 옷·집·음식”이었습니다.

줄피카르 부토는 1971년에 총리로 선출된 뒤, 사회주의를 말하고 자기 주위에 좌파 출신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에 줄피카르는 예전의 공약들을 어기고 사회주의자들을 PPP에서 축출했습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으로 복귀하면서 베나지르 부토는 과거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꺼내들었습니다. 베나지르 부토는 연설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대중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호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미국 지배계급은 보통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들을 매우 위협하게 여깁니다. 부토는 자신이 예전에 저지른 짓과는 상관없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습니

다. 국가 지도자로서 무사라프의 지위가 흔들리자, 미국은 베나지르 부토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가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에 계속 참가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서 말이죠. 미국은 PPP와 권력을 나눠 가지라고 무사라프에게 압력을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나지르 부토가 죽은 이상 이 거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키스탄인들이 베나지르 부토의 암살 배후로 이슬람주의자가 아니라 무사라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종종 무사라프야말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국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무사라프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주의 운동과 파키스탄 국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사라프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그런 사건들은 보통 파키스탄 군대

부토 암살에 항의해 거리로 뛰쳐나온 파키스탄인들

가 부족 지역들에서 군사 작전을 벌인 데 대한 보복입니다.

예컨대 최근 파키스탄 군대가 한 마을을 폭격해 50명이 죽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죽은 사람들을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로 신속히 규정하고는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군대가 애시당초 그곳을 공격한 이유나 [테러 활동과 연관됐다는] 물증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가 마을들을 공격한 결과 어떤 곳에서는 정부가 하도 미움을 받은 나머지 지방 관리들이 사무소나 학교를 건설하는 등의 가장 기초적 활동조차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군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단주의자들이 중앙 정부를 접수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과장입니다.

우익 급진 이슬람주의 정당들은 주류 정당 체제의 일부인데, 그들은 무사라프 정권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분열해 있습니다.

무사라프 정부는 이런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자기 지역에서 한자리 차지하게 해 주는 등, 그들을 정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무사라프 정부는 많은 이슬람 학교와 이슬람법 기구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여기 연관된 지도자들은 일자리와 돈을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당과 부족 지도자들이 무사라프 정부의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슬람주의 정당이나 부족 지도자들은 무사라프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한 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사라프 정부가 북서변경 주에서 군사 작전을 펴는 동안 이슬람주의 정당들 자신이 북서변경 주 정부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대중적 지지가 하락했습니다.

이 글의 전문은 <빛불>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시의 대안인가?

마틴 스미스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둘러싼 전투가 시작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월 3일 아이오와에서 코커스[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대회]를 열었다. 2008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선거가 될 것이다.

후보들은 11월 4일 대선 투표일까지 10개월 동안 약 1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동 6명 중 1명이 매일 저녁 식사를 굶어야 한다. 그 돈이면 이 아이들을 4년 동안 먹일 수 있다.

민주당 양대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는 1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준비해 놓았다. 미국 대선에서는 오직 부자와 권력자 들만이 당선할 수 있다.

조지 부시가 임기 동안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광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나 흑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할 가능성이 실제로 열리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양대 정당 중 그나마 차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많은 미국 급진 좌파 활동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차악

그러나 대선을 둘러싼 난리판을 뛰어넘어 근본적 물음을 던져야 한다. 힐러리, 오바마나 다른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과연 공화당 경쟁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또,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 중 미국 노동계급과 빈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사할 만한 자가 있는가?

힐러리와 오바마 모두 부시 정부와는 약간 다른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둘 다 호전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외교 정책들보다는 진정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내 전선에서 그들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약간 고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한 언론인이 말했듯이, “두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들의 공약들은 조지 부시가 8년 동안 초래한 손상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반전 운동의 희망이 될 수 없다. 힐러리는 부시의 이라크 침략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때문에 선거 운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바마도 별로 낯지 않다. 그는 차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3년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군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라크 수령에서 빠져나올 것인지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다.

영국 언론들은 민주당을 노동조합, 민권 운동 조직, 여성 조직, 단일 쟁점 캠페인 조직 등의 연합으로 묘사하곤 한다. 영국 노동당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노동당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재정 지원에 주로 의존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 기부금 중 93퍼센트가 민주당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은 민주당이 받는 기부금 중 14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부금 중 67퍼센트를 대기업들로부터 받고 있다.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존 케리는 선거 자금으로 무려 1억 8천7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총수들 — 크라이슬러의 리 아이어코카, 필드코프의 마샬 필드, 레비스트로스의 로스 하스, 심지어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프의 CEO 피터 셔넬도 — 이 대거 기부금을 냈다.

이 자들이 민주당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당이다. 2004년 민주당에 기부한 최상위 13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공화당에게도 돈을 줬다. 일부는 양대 정당에 똑같은 액수를 줬다.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

로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당의 다양한 싱크탱크와 연구소에 돈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민주당 후보와 정치인들에게 직접 조언하기도 한다.

백악관에 입성한 민주당 대통령들의 행동은 공화당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이 1993년 2000년에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자.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의 임기 동안 빈부격차가 열배나 늘었다. 연방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클린턴이 군사 행동을 지시한 횟수는 4명의 선임 대통령들의 지시 횟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으며, 심지어 그는 연방 복지 제도를 해체했는데,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조차 감히 꿈꾸지 못한 일이었다.

힐러리는 남편의 대통령 시절 ‘성공들’을 부각시켜 이득을 챙기려 했지만, 지난 1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것이 먹히지 않아 오바마와 존 에드워즈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미국 자본주의가 두 번째로 탄생시킨 거대 자본주의 정당이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 산업 자본가들이 승리한 뒤 미국에서 현대적 자본주의 경제가 탄생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것을 교대로 통치했다.

공화당의 권력 기반은 북부 산업가들이었으며, 민주당은 남부의 인종분리주의 엘리트들을 대변했다. 노동계급도 분열해서 서로 다른 지배자들을 지지했다.

개신교 노동자들과 투표권이 있는 흑인들은 보통 공화당을, 유럽 출신의 가톨릭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새로운 이주노

동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했다.

오늘날 민주당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당’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이것은 1933년 1945년 민주당 ‘황금기’의 유산이다.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심각한 경제 공황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한때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자였다. 민주당 대통령 프랭클린 로즈벨트는 이런 엄청난 위기에 대응해 몇몇 중요한 사회 개혁 정책들을 도입했다.

로즈벨트는 ‘뉴딜’ 동맹 — 노동조합, 흑인과 빈민 연합 — 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즈벨트 뒤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업 집단들의 연합이 있었다. 자본 집약적 산업, 투자 은행, 국제 상업 은행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런 기업들은 로즈벨트의 개혁이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지지했다. 로즈벨트는 자신을 “이윤과 기업의 자유의 수호자”라고 묘사했다.

당시 제도화된 개혁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노동조합들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955년에 민권운동이, 1960년대에 ‘블랙 파워’ 운동이 성장하면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도전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묘한 책략으로 이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1964년 1986년 사이에 선거에서 흑인 당선자 수가 1백3명에서 6천4백24명으로 늘었다. 오늘날 흑인들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들을 찍는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한편으로 대중 운동을 흡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교활한 행태를 보였다.

» 13면으로 이어짐

둘 다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당의 후보일 뿐이다

“삼성 족벌의 심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삼성 이견희의 범죄를 폭로하고 민주노조 건설을 추진한 ‘죄’로 무려 34개월을 감옥에 갇혀 고통받다
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출소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한 위원장**이 〈맛불〉 독자들을 위해 결코 꺾이지 않
은 투지를 담은 귀중한 출소 인사를 보내 주셨다.



삼성의 비리에 맞선 투쟁의 ‘외부 충격’은 삼성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도울 것이다

삼성 재벌의 인질이 돼 감옥에 있는
저를 격려하고 가족에게 힘이 돼 주신
동료들과 주위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옥담을 허물고 나온 지금 마음은 마
치 어제 감옥에 잡혀 있다가 하룻밤 자
고 나온 느낌이 들고, 며칠 지나지 않
았는데 지난 징역살이 34개월이 영 낫
설게 느껴지는 것은 구속 전이나 지금
이나 변하지 않은 세상과 노동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
은 됐지만, 비리 재벌, 정치 모리배 등
부도덕한 측근을 석방하는 데 구색을
맞추는 기만적인 석방이었기에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면
고마운 생각은커녕 분노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구속된 동지들의 석방은 이 나라 양심
과 사회 정의를 재는 도덕적 가치의 기
준이기에,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 석방
투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비리의 상징이 된 삼
성 족벌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인간의 삶
을 사느냐, 돈의 노예가 되느냐는 싸움

이 돼 버렸습니다.

이 싸움에서 삼성 족벌의 무노조 경
영을 박살내고,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
하는 싸움은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
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나, 노예의 삶이나

그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
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노
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기에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건설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좀
시간이 걸릴 뿐 그 어떠한 탄압에도 불
구하고 조만간 민주노조의 깃발을 삼성
족벌의 심장에 힘차게 꽂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 특검에 우려와 걱정
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
은 오래 못 가 망한다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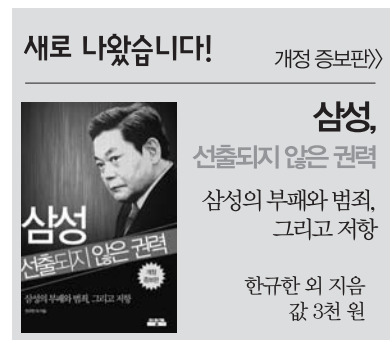
20년 전에 그 악랄한 군사독재 정권
을 맨손으로 몰아내고 국민들은 민주주
의를 쟁취했고, 나아가 87년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좀 더 나은 평등한 세상을 쟁취해냈습

니다. 이런 국민적 역량과 정신은 지금
도 의연히 살아 있어 정의로운 역사 발
전의 역동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 특검이 기만적으로 수사하
고 삼성 재벌에 면죄부를 주는 반사회적
인 결론으로 끝난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그리고 자중지란
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징역살이 동안 많은 관
심과 격려를 주신 〈맛불〉 독자 여러분
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삼성 각 계열사에 자주적인 민주노
조의 깃발을 힘차게 꽂는 그날까지 치
사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
아가겠습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개정 증보판》

삼성,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의 부패와 범죄, 그리고 저항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한규환 외 지음

값 3천 원

이천 화재 참사

이윤 체제가 만들어 낸 생지옥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참
사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생지옥이었다. 형
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린 시신들, 폭발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신들이 가득했다.

40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가난한 일용 비정
규직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먹고살
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 온 노동자들과 먼 이국
땅에서 서러움을 견디며 돈을 벌던 노동자들은
지하 창고에서 독가스에 발버둥치며 지옥불에
태워졌다.

언론은 이것을 ‘후진국형’ 사고이고,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사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
은 규제 완화와 이주민 차별을 추구하는 신자
유주의가 낳은 비극이고, 자본주의 이윤 몰이
의 논리적 결론이다. 이윤지상주의가 안전을
팽개치고 야만을 가져 왔다.

이윤지상주의

단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가장 높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 탈 때 유
독가스를 뽑아내지만 값이 싼 우레탄폼이 내
장재로 사용됐다. 하청·재하청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했다. 비용 절감을 위
해 축구장 3개 크기의 창고에 창문은 거의 만
들지 않았고, 출입구도 하나만 만들었다.

최소한의 안전보건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건축·시공·감리를 이름만 다른 하나의 회사
가 맡았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 관료를 매수했
을 것이다. 감독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화재
가 났지만 그 3일 뒤 소방필증을 내줬다.

이명박은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친기업 정책과 규제 완
화를 추구하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사회에서 이런 ‘날벼락’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명박의 ‘불도저’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과 건
강을 위한 모든 규제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희생자와 부상자 들은 대부분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 소속이거나 불법체류자라서 건강
보험은 물론 산재보험도 적용받기 힘들다. 가
난한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치료비는 평생의
명예가 될 것이다. 유족들의 절규와 온 몸이 봉
대로 감긴 부상자들의 절망어린 눈망울을 보며
느끼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는 모조리 신
자유주의와 이윤 체제로 향해야 한다.

전지윤

》12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미국 노동계급과 빈민의 희
망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미국 대선에서 50퍼센트 정도의 유권자
들만이 투표에 참가할 것이다.

정치인들 전반에 대한 환멸감이 깊다.
많은 미국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에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 그들이 옳다.

[민주당이 아닌] 급진적 대안이 필요
하다.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다. 과거에
그런 대안이 건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적이 있었다.

1920년대 유진 뎀스라는 사회주의자

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 거의 1백만 표를
얻었다. 1930년대와 1960년대에는 민
주당에 대한 급진적 대안을 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었다. 2000
년 대선에서는 급진적 활동가인 랄프 네
이더가 2백70만 표를 얻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심각한 경
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아프가니
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끝낼 정당이다.

이 정당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
을 선사할 것이고, 대중은 선거에 참가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힐러리
와 오바마는 절대 그런 희망이 될 수 없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기업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지배계급은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가 당선하든 만족할 것이다. 둘 다 지
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좌파와 평화 활동가들은
노동 대중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
면해 있다.

마틴 스미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존 콜트레인
- 재즈, 인종 차별, 그리고 저항》이 있다.

생지옥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생존자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군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파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노동계급 자기 해방의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맞불〉동지들에게 새해 벽두 비록 갑옷 창살 안이지만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껏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한껏 고무시키며 활력소가 돼 왔듯이, 2008년 새해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열정과 힘찬 기사로 거듭나 함께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맞불〉은 활동하면서 토론하고 주장할 때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데 훌륭한 가이드가 돼 줍니다. 성경 신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 중에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등 “영적 무장”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며 ‘〈맞불〉을 통해 노동자들이 “계급적 무장”을 고무하고 기여한다면, 그래서 노동해

방을 앞당기는 데 나아간다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의 강력한 검 〈맞불〉을 움켜쥐고 투쟁할 때, 더 많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고무하고 확산시키는 데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2008년 새해 아침, 조민호

[편집자] 이랜드 투쟁 연대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2달간 복역한 조민호 동지는 지난 1월 3일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조민호 동지의 출소를 환영한다.

2007년 12월 28일
김천교도소에서 이지경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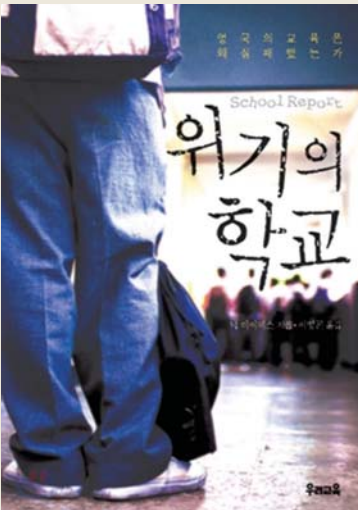
[편집자] 2006년 포스코 본사 점거 투쟁을 이끌었던 이지경 전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은 17개월의 고된 수감 생활 끝에 지난 12월 31일 출소했다. 이지경 동지의 출소를 환영한다.

서평

이명박 교육 정책의 잣빛 미래를 보여 주다

《위기의 학교》

닉 데이비스 | 우리교육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은 “교육도 경쟁해야 한다”며 ‘자율’과 ‘경쟁’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의 학교》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쟁과 시장 논리가 어떻게 영국 공교육을 파괴했는지 선명하게 폭로하는 현장보고서다.

저자는 빈곤과 인종차별 문제 등에 관해 중요한 탐사 보도를 해 왔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18개월간 영국의 학교 현장과 정부 부처를 파고드는 성실한 취재로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을 비판하고, 공교육의 위기가 바로 사회적 빈곤 문제, 계급적 불평등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960년대 말 영국은 대입 준비과정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이류 학교’로 나뉜 공교육의 불평등을 개선하려 했다. 이런 진보적 개혁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출신 배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함께 교육하는 종합중등학교를 도입했다.

이것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나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대처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신노동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은 영국 공교육의 진보적 성과들을 갉아먹고 그 껍데기만 위태롭게 남겼다.

무단 결석

신자유주의 ‘개혁’은 학교 선택과 학생 선발을 자율화해 가난한 학생들과 부유한 학생들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각 학교의 학력 평가 순위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결국 부유한 지역 학교들이 더 많은 예산을 받고, 빈곤 지역 학교들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 하게 됐다. 그래서 빈곤 지역 학교는 교사들에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고 시험 결과를 조작하도록 공공연히 조장했다.

이제 빈곤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공립 학교들 간 학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학력 저하, 무단 결석과 퇴학을 증가로 표현되는 ‘실패한 학교’들은 대부분 도심 빈곤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대다수 학생의 가정은 집세를 내지

‘다함께’에서 보내 주신 〈맞불〉은 잘 읽고 있습니다. ‘다함께’ 회원인 안병문 동지는 운동 시간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몸 건강히 잘 계십니다. 그리고 전해투의 강성철 동지도 단식을 풀고 무사히 복식중입니다.

‘다함께’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로 이랜드 투쟁이 지금까지 힘있게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의 몸이지만 이랜드 투쟁에 연대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연대해 주세요. 그리고 힘차게 투쟁중인 장기 투쟁 사업장에 격려의 말씀 전해주세요. ‘다함께’ 동지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16일 이군봉

[편집자] 이군봉 동지는 2002년 미군의 여중생 압사에 항의 하는 투쟁 때에 구속된 바 있다. 병환을 앓고 있는 노모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됐다.

못할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전체 학생의 7퍼센트밖에 안 되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상위권 주요 대학 입학생 중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위기의 학교》는 바로 이명박의 교육 정책이 초래할 잣빛 미래를 보여 주는 수정구슬과도 같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은 대처 정부와 신노동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과 똑 닮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대입 자율화는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학생과 부유한 학생을 분리시키고 학교 간 격차도 늘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저자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 사회의 모순과 계층 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그저 이윤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이명박에 맞선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만이 진지한 대안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 책은 그 출발선에서 훨씬 분명한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류민

청소년 지회 포럼

지구적 환경 위기 —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장호중(주간 〈맞불〉 기자)
일시: 1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미지센터(충무로역 4번 출구)
문의: 010-6822-8692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투쟁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비정규직 투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GM대우 부평공장·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KTX 노동자들의 서울역 천막농성 재개 등 불굴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루코 비정규직,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꾼 후 해고돼 투쟁에 나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처럼 새로운 투쟁도 잇따랐다.

게다가 올해 비정규직 약법이 1백 인 이상 3백 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도장공장을 기습 점거했다. 곧 구사대에 끌려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지금 투쟁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번 투쟁은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 중 한 곳이 폐업하고 이름을 바꾸면서, 노동자들의 근속연한을 무시하고 재입사 계약서를 강요한 데서 비롯했다.

고용·근속연한 승계는 지난 2003년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따낸 성과였다. 당시 아산공장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폭행·테러에 항의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8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아산공장 전체를 멈춰 세웠다. 사내하청노조 결성도 이 투쟁의 성과였다.

근속연한 인정은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임을 인정하는 셈이라 사측은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2007년 하반기부터 현대·기아



2005년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 열린 아산공장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집회 - 강력한 연대 투쟁은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차 협력 업체들은 업체 폐업 시 근속연한을 인정하지 않고 재입사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사내하청지회 도장부 현장조직위원회(준)는 "업체 변경은 불법파견을 덮으려는 알파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또 "연월차 승계를 막고 근속연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까지 축소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측의 시도가 관철된다면 아산공장의 다른 하청업체들은 물론, 현대차 전체 공장과 기아차 등 다른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공격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공격의 확산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투사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번 투쟁이 승리하려면 아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연대'를 공약했던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도부는 공약 실천에 나서야 한다.

2003년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를 만든 힘이었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정신을 되살린다면 통쾌한 반격을 이룰 수 있다.

정종남

송파구청의 새해 선물은 대량 해고?

지난해 말 송파구청은 재활용 수거를 담당하던 환경미화 노동자 25명과 동사무소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20여 명을 해고했다. 재활용 수거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대량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민원 안내를 하다가 해고된 임정재 동지가 5개월의 투쟁 끝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인 일이다. 아마 '이명박 당선 기념'일 듯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수년간 주민들을 위해 땀 흘리게 일해 왔다. "정해진 동네를 매일 나가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근육주사 맞고 약 먹으며 일했는데 구청은 우리더러 쉴모 없다고 이제 나가라고 해요."

이들은 자정 무렵 시작해 오전 9시가 돼야 끝나는 고된 일을 수년간 해왔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보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두 아이와 사는데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일하다 새벽 6시면 전화해서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곤 했어요."

구청은 연봉이 지금보다 1천만 원이나 적은 위탁 업체로 입사하라고 강요한다. 민간 기업이 주민들의 편의를 이윤 추구보다 우선할 리도 없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구청장실 앞 농성을 하며 구청장 면담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는 불평 한 마디 못하고 참아왔지만 이번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자기를 마음대로 부렸어요. 이번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

임미영

공무원노조 분열과 통합 논의에 부쳐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2008년 시작과 함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합법 전환한 노조가 더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1월 안으로 '해고자'가 노조 전임간부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이후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된 조합원 1백56명(1백20명은 전공노, 36명은 민공노 소속)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곧바로 이명박의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준비해 온 '공무원연금 개악'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은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바톤을 이어받으려는 것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이에 맞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다. 이는 전공노와 민공노 조합원들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 전체의 염원일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민공노로 분열돼 있다. 그러나 애초 분열의 원인이었던 '공무원노조특별

법'(이하 특별법) 수용 여부는 전공노와 민공노 모두 특별법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더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안타까운 점은 특별법 수용 여부라는 전술 논쟁이 공무원노조 내 지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지도부가 분열했고, 양 노조 지도부가 서로 고소·고발까지 서슴지 않는 종파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먼저 전공노 지도부는 "모든 소송을 동시에 중단하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공동현안을 놓고 함께 투쟁하자"는 민공노 정현재 위원장의 호소를 수

용해야 한다. 물론 분열 과정에서 전공노 활동가들이 느낀 울분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통합 움직임에 회피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민공노 지도부의 공동투쟁 제안을 '입발린'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참회'하라고 으박지르는 것은 통합 거부로 보일 수 있다.

민공노 지도부도 진정으로 노조 통합과 공동투쟁을 원한다면, 조합원 다수의 지지로 당선한 전공노 3기 지도부를 탄핵하고 사법부에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해야 한다.

전공노와 민공노의 활동가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현장조합원들 속에서 이명박의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결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와 분열을 돌파할 수 있다.

최영준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사해에는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해를 넘겨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기독교계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해 20여개의 진보적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는 수만 부의 유인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계속해서 지지 예배를 열고, 박성수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시위도 벌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25일 상암 홈에버 앞에서 이랜드 노동자들을 위해 열린 성탄 예배에는 3백 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가했고, 투쟁기금이 4백만 원 넘게 모였다.

이명박 당선 축하 예배를 할 정도로 보수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랜드 그룹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이 문제가 "더 이상 국가적 · 사회적 · 인권적 · 선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박성수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임"하라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박성수가 장로인 '사랑의 교회'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하자 '인생의 목적이 선교'라던 박성수는 농성 4일 만에 '사랑의 교회' 장로직을 사임해야 했다. '사랑의 교회'

회' 일부 신도가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와 기도해 주는 일도 있었다.

투쟁이 장기화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영웅적인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열린 이랜드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투쟁을 선택했다. 지난 투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던 조합원들이 모두 단호한 목소리로 해고 · 구속 동지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서 싸우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파업에 동참했던 7백여 명의 조합원 중 여전히 4백여 명이 파업을 유지하고 있고 복귀한 조합원 중에서도 노동조합 탈퇴자는 거의 없다. 심지어 일부 사측 관리자들마저 파업 조합원들을 격려해 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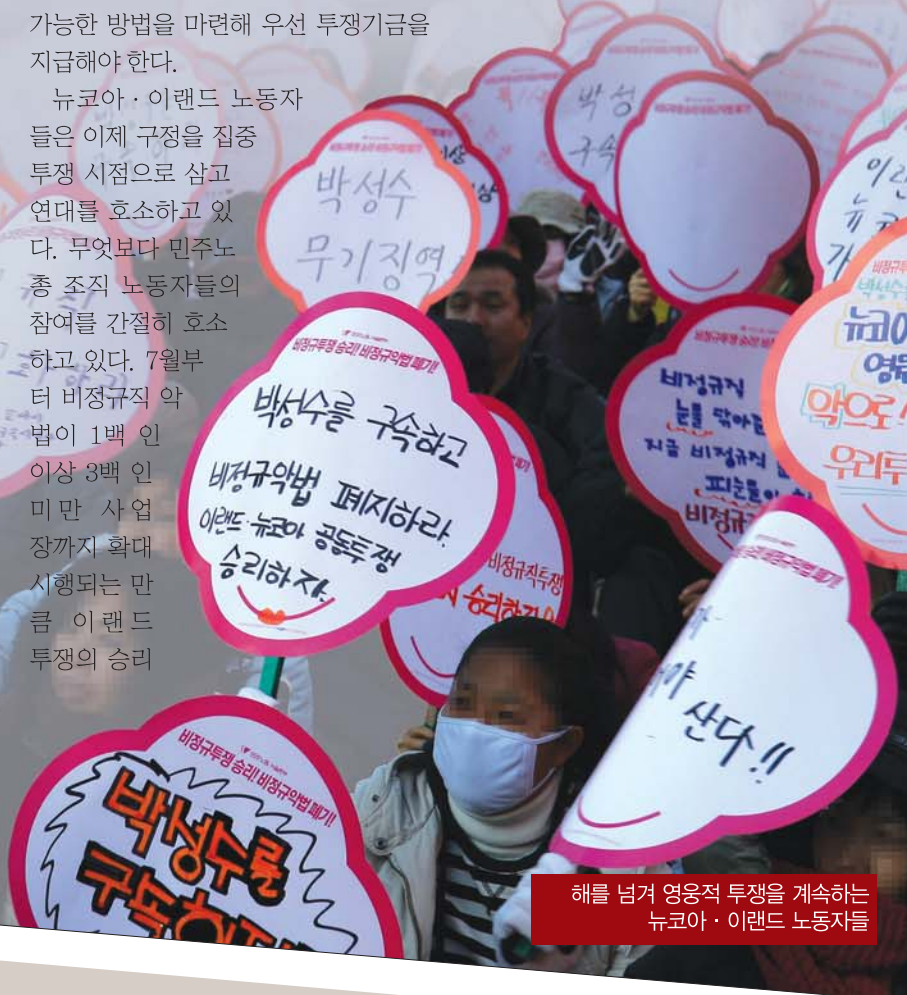
이명박이 당선하자마자 재벌들을 만나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운운하며 대대적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랜드 투쟁의 성패는 중요하다. 얼마 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랜드부터 다시 총력을 모아 끝낼 생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천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특히,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인 생

계비 지급부터 실천해야 한다. 최근에 기아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이랜드 투쟁 기금 납부를 결의한 고무적 사례는 현대차와 금속노조 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서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우선 투쟁기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이제 구정을 집중 투쟁 시점으로 삼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7월부터 비정규직 악법이 1백 인 이상 3백 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이랜드 투쟁의 승리

는 더욱 중요하다. 1월 11일 오후 3시 홈에버 시흥점에서 열리는 이랜드일반노조 파업 2백 일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시작으로 다시금 연대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



해를 넘겨 영웅적 투쟁을 계속하는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

1월 26일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1월 26일 세계 곳곳에서 "다른 세계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라는 기치 아래 공동 행동이 조직된다.

2007년 6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인들의 결집 장소인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2008년 1월 26일에 맞춰 세계 곳곳에서 국제 공동 행동을 조직하자고 결정했다. 현재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서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사회

진보연대, '다함께', 한국진보연대 등 다양한 민중운동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1.26 행동은 이명박 당선 이후 벌어지는 한국 민중운동의 첫 번째 시위가 될 것이다. 이명박은 당선하자마자 자이툰 파병 연장을 주도했고,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1.26행동을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조직위원회의 다수인 PD 경향이 BBK 부패 문제를 시위의 의제로 포함시키자는 '다함께'의 제안을 거부

한 것은 아쉽다. BBK 등 부패는 집권 기간 내내 이명박의 원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월 26일 시위는 이명박과 노무현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투쟁의 가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저지범국민도 이날 시위를 범국민의 일정으로 삼고 함께할 계획이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를 위해 1.26 행동에 동참하자.

김광일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
FTA · 빈곤 · 전쟁 · 차별 없는

다른 세계를 위하여
일시: 1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도심
주최: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노명박’의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를 저지하라

지난해 연말 회동에서 '노명박'은 한미 FTA의 2월 임시국회 비준을 결의했다.

이명박은 "한미FTA 협상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찬양했고, 노무현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무현은 공식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임기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싶어하고, 철저한 시장주의자 이명박은 공식 취임 전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처리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대기업들도 재빠르게 나서고 있다. 1월 9일 전경련 등은 "한미FTA 조기 비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

장은 없다.

한국 진보 진영은 1998년 IMF 경제공황과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저항한 전통과 조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은 1월 26일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과 2월 중순의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질 투쟁들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이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광일